

오리 휴지기제, 가야할 방향은?

출처 : 축산경제신문

오 | 오리 휴지기제 현황

올해로 벌써 3년차인 오리 휴지기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오리 휴지기제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갈리고 있다.

정부는 휴지기제 도입으로 AI 발생이 극감해 살처분 비용이 감소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 반면, 농가와 관련업계는 산업이 초토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떻게 시행되나

휴지기제란 AI 고위험지역 소재 오리농가의 동절기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AI 발생위험을 낮추는 제도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및 반경 500m 이내 농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발생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또는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지자체 방역수준 평가결과 미흡농가 등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 등이다.

보상단가는 육용오리의 경우 동절기 마리당 평균 순수익의 80%인 873원, 종란은 병아리 단가 1,202원의 50%인 개당 6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시행규모는 전국 201개소, 292만2000마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사육제한에 51억200만원, 종란 폐기에 17억5300만원 등 총 68억5500만원이 소요된다.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 원칙이나, 농장별 출하시기를 고려해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수 있으며, AI 발생시 연장될 수 있다.

왜 시행하나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AI를 겪어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오리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때마다 AI가 발생하는데, 매년 오리에 먼저 유입돼 다른 축종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여왔다는데 있다. 또한 오리 사육농장수는 닭의 약 18% 수준인 반면, 2014년 이후 발생한 834건 중 56%인 466건이 오리로 집계되는 등 오리의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9월 현재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AI가 발생중인데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철새 유입경로 상에 있는 대만에서 매일 AI가 지속 발생하는 등 발생 위험성이 높은 까닭에 올해 동절기에도 사육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中 | 부정적 효과 더 크다

방역당국은 오리 휴지기제가 고병원성 AI 예방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휴지기제 시행 전인 2014~2015년과 2016~2017년에는 각각 391건과 421건의 AI가 발생했지만, 휴지기제를 도입한 2017~2018년에는 22건 발생에 그쳤고 2018~2019년에는 발생 자체가 없었다는 것.

또한 재정 면에서도 2014~2015년과 2016~2017년 각각 3,364억원과 3,621억원이 소요된 반면, 2017~2018년과 2018~2019년에는 각각 21억원과 30억원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반면 농가와 계열업체들은 이같은 오리 휴지기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까닭에 손질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지기가 매해 겨울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내 오리산업이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휴지기제로 수급 불균형 초래

이들은 오리휴지기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제로 2년간 극심한 몸살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2017년 12월 오리 총 사육마릿수는 휴지기제에 따라 전년보다 7.1%

감소한 753만 마리, 육용오리는 9.3% 감소한 670만8000마리였다. 사육가구수도 12.2% 감소한 497가구였으며, 1월 종오리와 육용병아리 입식마릿수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3.1%와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오리가격은 수급차질 문제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평균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14.5% 상승한 3kg당 8,148원이었고, 3~4월은 전년보다 21.5% 상승한 3kg당 9,279원이었다.

때문에 이를 경험한 계열업체들은 돌아오는 휴지기에 대비해 냉동 비축물량을 늘렸고, 그 결과 올해는 역대 최악의 판매시세와 냉동재고 등의 문제로 인해 곤혹을 겪었다.

휴지기제가 시작된 첫 해에는 수급부족으로 인한 오리가격 고공행진이, 이듬해에는 휴지기제에 대비한 과잉생산으로 오리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것이다.

생산자·소비자 모두 악영향만

최근 오리자조금 주최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방안 조사연구’도 이의 반증.

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260개 농가, 오리 352만 마리에 대해 휴지기제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후생 218억원, 생산자 후생 170억원 등 총 388억 원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했다.

또한 연관산업 분석결과 휴지기제와 고병원성 AI로 인해 오리 생산액 467억원, 타 산업 생산 유발액 738억원 등 전 산업에 대해 총 1,206억원의 생산액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오리 휴지기제는 인위적 공급제한 조치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후생 감소가, 정부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지기제로 오리가격은 상승했지만 전체농가의 소득증가 효과는 마이너스였으며, 휴지기 미참여 농가만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드러나, 오리 휴지기제가 연례적으로 시행될 경우 계열업체들은 동절기 물량 확보 및 안정적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오리 휴지기제가 오리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크다는 것.

또한 휴지기제에 따른 인위적 공급제한 조치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다.

전후방 피해도 만만찮아

오리 휴지기제로 인한 전후방산업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사육소득과 친환경농가 직불금, 친환경농가 장려금 등의 농가 소득감소는 차치한다손 치더라도, 계열사 판매수익과 부화장 수익 등 전방산업 피해와 사료생산 감소, 약품, 상하차반 소득 등 후방산업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만 약 500억원에 달한다는 것.

반면 현행 규정은 해당농가의 소유자 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돼있는 까닭에 그 밖의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가공장 등 관련업계의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97%가 계열화돼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종오리장·부화장·도축장 등으로 피해가 직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下 | 사육환경 현대화가 최선의 길

오리 휴지기제가 오리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오리농가의 소득감소는 차치한다 치더라도, 수급불균형에 따른 오리가격 등락과 함께 계열사 수익감소와 사료·약품 등 전후방산업의 피해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6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오리 휴지기제에 따라 사회적 후생 388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전체 오리산업에 대해 총 1,206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같은 관련업계의 피해를 감안, 휴지기제 대신 근본적인 문제인 사육시설 개편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설 열악하고 방역시설 미흡

실제 국내 오리농가의 사육시설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자조금 주최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간 전국 950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방안 조사연구’에 따르면, 축사 형태는 비닐하우스형이 76.3%, 샌드위치판넬형이 14.1%, 트러스형이 8.8%였다.

또한 축사 축벽과 지붕의 단열재 재질은 주로 보온덮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축사 바닥 재질은 대부분 흙바닥(94.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리 사육농가의 방역시설이 다른 가금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육용오리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이 가장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축사 외부 주차공간과 소독시설이 육계나 종계, 산란계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먼저 축사 외부 주차공간은 육용오리가 43.5%로 육계 77.8%, 종계 56.7%, 산란계 52.3%보다 낮아 외부인 방문시 차량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축사입구의 차량 소독시설과 사람 출입구 소독시설도 각각 91.5%와 90.2%로 상대적으로 취약했으며, 휴대용소독기, 펜스 등 방역장비 구비현황도 육용오리가 56.6%로 타 가금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대화사업 통한 선진화 시급

이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오리 사육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리 사육시설을 개선한다면 고병원성 AI의 발생과 전파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액과 생산자,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낮추는 등 방역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오리농가의 사육성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지인배 동국대학교 교수도 이에 동조했다.

지인배 교수는 “오리 사육 휴지기제는 일시적인 오리가격 상승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참여농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취지인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I 예방을 위해서는 사육시설 개선 및 방역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 교수는 이어 “오리축사 현대화사업은 모든 오리 사육시설을 무창 또는 유창사로 전환해 오리의 사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은 높이고 AI 등 질병발생을 억제해 오리 산업을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향은 농가의 참여도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안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